

한국학 이슈

근현대 동아시아 과학기술사의 전개와 한국학의 전망

서호철 · 강기천 · 신유정 · 이종식 · 정준영 · 현재환

2025년 여름호에 이어 이번 <한국학 이슈>에서는 한국학이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전통적 범주를 넘어, 근현대 과학기술사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 외연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과학사 및 과학기술학(STS)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서구 중심의 보편적 과학 서사에서 벗어나 한국 과학의 고유한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 개요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13:30~15:30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사회: 서호철(『한국학』 편집위원장,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패널: 강기천(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신유정(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이종식(카이스트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정준영(『한국학』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재환(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서호철: 오늘 간담회는 “한국학이라고 하면 대개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 등을 생각하는데 자연과학과 공학 같은 ‘이과’ 학문 분야들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자연과학·공학 연구자들과 바로 대화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간쯤에서 양쪽에 다 발을 딛고 있는 과학학·과학기술사 연구자들을 모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또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겸해서 연구하시는 분

아에 대해 돌아가면서 잠깐씩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사, 역사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학술지 『한국학』 편집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구성도 그렇고 『한국학』도 그렇고, 한국학이라고 하면 보통 인문학과 사회과학, 거기에 예술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다루는 분야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다루는 분야가 있겠지요. 저희 연구원 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한문 자료를 읽는 사람들이 있고, 영어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 이런 쪽은 상황이 애매합니다. 일단 아주 옛날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라시대의 건축이나 직지, 『동의보감』 등은 당연히 한국학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빼놓고 한국학을 말할 수는 없죠. 역사 전공자들이 그쪽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주제에 접근하는 관건이 옛날 자료를 읽는 능력인가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인가 하는 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이나 의학은 어떨까 하면, 일단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내용도 어려워서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요즘 관심이 많은 환경이나 생태 문제나 AI 같은 것은 실생활에 중요하고, 한국의 국제경쟁력과도 연관되고, 더 중요한 인간 경험의 확장이나 윤리 같은 철학적 문제도 있기에 모른다고 아예 다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학술지에 그런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이 투고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순전한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 논문은 안 들어오겠지만, 얼마쯤이라도 그런 쪽의 내용을 품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학술지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반려를 해야 하나, 한국학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유치해야 하나, 하는 거지요. 사실 한국학 초기에 한국학이 전통적인 국학 위주냐, 아니면 현대의 사회과학도 포함할 거냐로

다투었던 논쟁과도 비슷합니다. 영어로 한국에 대해 쓰는 이른바 해외 한국학 저술들을 보면, 오히려 국내 연구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도 해요. 비무장지대를 놓고 평화와 생태를 함께 논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하지만 해외 한국학이라는 것은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니까 다소 종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과 분야까지 다 겨안는 포괄적 한국학이라는 게 가능할지, 또 그게 과연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모신 과학사, 과학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분야 자체가 한편으로는 역사나 철학,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들어 보려는 것인데요. 취지를 겸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영: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학』 편집위원 자격으로 편집위원장님을 돕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호철 선생님께서 한국학의 경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회학을 통해 연구자로 훈련을 받았습시다만, 현재 제 연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제는 한국학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맥락과 다른 접근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사례로서의 한국학’과 ‘과제로서의 한국학’ 같은 구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인문학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어떤 보편 이론이 있다면 그 적용과 변용, 확장을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한국적인 것’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것을 그저 하나의 사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포함되는 한국인이라는 ‘오디언스(audience)’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의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설정하면 너무 과장일까

요? 그리고 특히 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학이라는 것을 사회학이랄까 역사학이랄까, 아니면 과학사 혹은 과학학과 같은 분과학문(discipline)과 같은 선상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학과 한국학 사이의 결합이랄까, 과학학이나 과학사가 한국학과 어떤 접점을 가지느냐 등의 질문은, 그래서 저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내가 사회학을 공부했고 연구 대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한국의 연구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과제,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학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실은 공존이 가능하겠지요. 이런 관점에서는 심지어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외국학도 넓은 의미에서는 ‘과제로서의 한국학’의 일부로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의 분과학문이라도 되어야 할 것처럼 엄밀함을 내세우며 안과 밖의 경계를 가르고 그 안으로 움츠러들려는 경향이야말로 한국학이 경계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학계에서 제일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신진기예의 과학사, 기술사, 과학학 연구자분들을 모셔서, 한국학의 안과 밖을 훑고, 그 가능성과 전망을 더불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편집실의 여러 선생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신 한국학의 모습이랄까, 특히 국내의 학계, 그리고 과학사, 기술사, 과학학 연구자로 활동하시면서 한국학과 관련해서 느끼셨던 고민이나 소회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철: 다음은 강기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학부 전공이 수학인가요?

장기천: 예, 수리과학입니다.

서호철: 그러시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천: 저는 장기천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현재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학생들이 전공을 고르고 다전공을 할 때 상담해 주고, 어떤 전공이 있는지, 어떤 수업을 들으면 효과적인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면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는지, 혹은 특정한 관심사가 있다면 그 분야로 나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일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사논문은 ‘서울대 공대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석사 때는 한국과학재단에 대해 썼고, 박사 때는 서울대학교 공대에 대해 썼다 보니까 대학 언저리에 계속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사를 연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학의 연구를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학에서 하는 연구라는 게 대부분 기초 연구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물론 공대에서는 응용 연구나 개발 연구도 하지만, 어쨌든 대학에는 기초 연구를 한다는 기대가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기초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과학사이긴 하지만, 사실 과학은 어떻게 보면 소재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대학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학의 연구 시스템이라든가 연구비의 흐름이라든가 연구비를 나눠 주기 위한 기준과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철: 신유정 선생님도 학부가…?

신유정: 저는 학부는 기계공학을 나왔고요. 지금은 과학사와 과학기술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문제의식은 ‘우리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조건, 그리고 과학 지식이 순환되는 조건,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과학 지식이 우리가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실행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인공물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 수많은 사회적 자원들을 투입하는데 (그것이 연구비가 됐든 교육·인력이 됐든) 이것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는지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영향까지 함께 보는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에 있는 제도적·정책적 조건에 관심이 많고요. 박사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의 AI처럼 굉장히 각광받던 학문인 뇌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¹ 한국에서는 뇌연구라고 많이 하고, 북미권에서는 신경과학이라고 더 많이 하는데요.² 그 당

1 현대적 의미의 뇌연구라는 이름 아래 신경과학이 미국에서 처음 제도화되는 과정을 조명한 필자의 연구로는 Youjung Shin, “For or Against the Molecularization of Brain Science?: Cybernetics, Interdisciplinarity, and the Unprogrammed Beginning of the Neurosciences Research Program at MIT,”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Vol. 36, No. 1(2023), pp. 103~130이 있으며, 이와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에서 초기 신경과학 연구가 정착되는 과정을 다룬 논문으로는 Youjung Shin, “The Transnational Move of Interdisciplinarity: The Beginning of Neuroscience in South Korea, 1970~1990s,”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Vol. 31, No. 4(2022), pp. 466~489이 있다.

2 왜 한국에서 뇌연구가 뇌과학, 뇌공학, 뇌의약학을 포괄하는 범주로 자리 잡고 법제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Youjung Shin, “Policy Entrepreneur in the Information Society:

시에 “인류의 마지막 미지의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수사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지원이 들어갔던 학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하에, 사실 뇌연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해 낼 것인가, 그런 학문인데, 이와 관련된 권위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갔는지, 지식 생산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 왔습니다.³

그리고 이에 더해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소위 뇌와 관련된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흐름이 있었고 한국도 참여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거대과학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저는 이런 국제 거대과학의 장—과학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저는 그곳을 마치 개별 연구실처럼 중요한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장으로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특정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모습, 또 이것이 사회에 유통되는 모습, 그리고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고, 현재는 뇌연구뿐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과학, 마인드 사이언스, 행동 과학이나 인지 과학, 그런 쪽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⁴ 최근에 작업

Shaping the Interdisciplinarity of Brain Research in Korea,” *Minerva*, Vol. 56, No. 2 (2018), pp. 231~257를 참고하라.

- 3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1980년대 기초연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경망 연구를 중심으로 초기 인공지능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Youjung Shin, “The ‘Spr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its Global ‘Winter’: Korean Language and AI researchers in the late 1980s,”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Vol. 41, No. 4(2019), pp. 7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한국의 학생정신건강 전수조사 사례를 과학사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Youjung Shin, “Screening as Governmental Technology: The Nationwide Collection of Mental Health Data on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Vol. 78, No. 3(2023), pp. 304~327이 있다.

한 논문 중 하나는 1960년대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 적성 검사가 도입됐던 그런 사례들의 국제적인 맥락에 대한 것을 연구했고,⁵ 그렇게 다양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 교육 및 정책사 등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⁶

서호철: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현재환 선생님은 최근에 소속이 바뀌었죠?

현재환: 예. 한양대학교 철학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과학사철학(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및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전공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선생님과는 달리, 저는 학부 입학 당시 역사철학부 소속으로 역사학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제가 입학했던 2006년 당시 모교가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인문학 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하위 트랙으로 제공되던 STS 전공을 앞의 두 전공과 함께 다중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원에서도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공부를 이어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연구 분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과학사라는 분야도 워낙 넓어서 정말 다양한 연구 접근 방법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학계에서도 신유물론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사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과학적 사물이나 기술적인 도구들, 혹은 실

5 해당 논문은 “Contested Travels of Aptitude Tests, and Their Local Legacies: Transnational Validity-Making and the USAID-AIR Worldwide Aptitude Testing Project in the 1960s”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에 투고되었고, 현재 심사 진행 중이다.

6 관련 논문으로는 신유정, 「대덕연구단지의 두뇌 만들기: 카이스트의 대덕 이전 및 대학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21-3(2021), 4~37쪽; 신유정·우태민·박범순, 「과학 제도의 수입: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서의 벤치마킹의 정치성」, 『한국과학사학회지』 42-1(2020), 275~302쪽 등이 있다.

협동물이나 환경적 조건 같은 물질성에 주목하는, 그런 물질적 역사가 상당히 주류적 접근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서적들도 대체로 이런 물질적 역사 연구들입니다.⁷ 저도 동아시아의 마스크 역사에 관한 연구를 짧게나마 수행했고,⁸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신유정 선생님과 비슷하게 지식 생산과 유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⁹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지식이 형성·유통·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와 정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영역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라는 과학과 사회의 상호 구성적 과정에 항상 주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집필한 박사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인류학과 유전학 연구사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각 시기별로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
- 7 Marieke M. A. Hendriksen, "Material and Performative History of Science," in Lukas M. Verburgt(ed.), *Debating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Science*(London: Bloomsbury Academic, 2024), pp. 213~229; Lino Camprubí, "Material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s," in Gustavo E. Romero, Javier Pérez-Jara, and Lino Camprubí(eds.), *Contemporary Materialism: Its Ontology and Epistemology*(Cham: Springer, 2022), pp. 161~183.
- 8 Jaehwan Hyun, Akihisa Setoguchi, and Mary Augusta Brazelton, "Some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Masked Societies in East Asi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6, No. 1(2022), pp. 108~116; 현재환, 「일제강점기 위생 마스크의 등장과 정착」, 『의사학』 31-1(2022), 181~220쪽; Jaehwan Hyun, "Unmasked Barbers in Unhygienic Places: Masks and the Politics of Barbering Hygiene in Colonial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Vol. 34, No. 1(2025), pp. 89~120; 현재환·홍성욱(편), 『마스크 파노라마: 흑사병에서 코로나19까지, 마스크의 과학과 정치』(서울: 문학파지성사, 2022).
- 9 John Krige(ed.), *How Knowledge Moves: Writing the Transnational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과학과 정치가 서로 어떻게 얽히며 ‘공동 생산(co-production)’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¹⁰ 박사과정 코스워크 기간에는 주로 서양 과학사와 STS 분야의 영문 저술들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접했던 논의들은 제가 주목하던 한국의 사례와는 잘 맞지 않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서구 학계는 주로 ‘인종(race)’이라는 범주에 집중하지만, 한국과 동아시아 맥락에서 가장 자명하고 핵심적인 분석 단위는 ‘민족(民族)’이었기 때문입니다.¹¹ 생물학화의 과정이 인종이 아닌 민족이라는 단위에서 일어났다는 점부터가 서구의 사례와는 달랐습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서구 과학사에서는 1945년 이후 새로운 체질 인류학이 등장하며 인종 과학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고 서술해 왔으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사례를 보면 1960~1980년대까지도 생물학계에서 상당히 인종주의적인 과학 연구들이 지속되었습니다.¹²

10 공동 생산이라는 STS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Sheila Jasanoff(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Order*(New York: Routledge, 2004).

11 ‘인종’ 용어 사용에 대한 천착을 잘 보여 주는 최근의 사례로는 다음을 참고.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Using Population Descriptors in Genetics and Genomics Research: a New Framework for an Evolving Field*(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3).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Jaehwan Hyun, “Translation Matters: Racial Classification in South Korean Genetic and Genomic Research,” in Tino Pluumecke, Andrea zur Nieden, Nils Ellebrecht, Isabelle Bartram, and Veronika Lipphardt(eds.), *The Order of People: Contesting Bio-Scientific Human Classifications*(Bielefeld: Transcript, 2025), pp. 133~149.

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종 과학의 폐퇴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 Elazar Barkan, *The Retreat of Scientific Racism: Changing concepts of Race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between the World War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Jonathan Marks, “The Origins of Anthropological Genetics,” *Current Anthropology*, Vol. 53, No. S5(2012), S161~S172.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의 한계에 대한 지적으로는 다음을 참고. Jaehwan Hyun, “Blood Purity and Scientific Independence: Blood Science and Postcolonial Struggles in Korea, 1926~1975,” *Science in Context*, Vol. 32,

이렇듯 서양 중심의 과학사 서술로는 포착되지 않는 공백을 마주하며 고민하던 세계 한국학 연구들은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정준영 선생님의 식민지 혈액형 의학 연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¹³ 이뿐만 아니라 제 박사논문의 출발점이 된 2015년의 체질 인류학자 나세진의 한민족의 체질 연구에 관한 논문 역시 정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한국 식민지 과학에 관한 특집호에 참여하며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¹⁴ 이런 점에서 비록 과학사 및 STS를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역사사회학을 비롯한 한국학 분야 연구자분들의 성과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참조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논문 이후의 연구 여정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논문을 집필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인류학이나 유전학의 역사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연구로 지평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양 과학사를 일종의 정설로 먼저 학습한 뒤 한국의 사례를 그 틀에 맞추어 살피는 기존 연구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입니다. 앞서 정준영 선생님께서도 짚어 주셨듯이, 이러한 방식은 자칫 한국 과학사를 서구에서 정립된 보편 이론을 단순히 적용하거나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하는 식의 부차적인 논의로 머물게 할 위험이 큼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기존의 과학사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탈중심화할 수 있는 학술적 잠재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이후 연구들은 최근 학계에서 부상한 글로벌 과학사(global history of science)의 새로운 흐름에 일조하는 방향

No. 3(2019), pp. 239~260.

13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 의학」, 『의사학』 21-3(2012), 513~549쪽.

14 정준영, 「식민지와 과학, 그 형용 모순의 관계를 넘어서기」, 『한국과학사학회지』 37-1(2015), 199~207쪽; 현재환, 「지방차(地方差)와 고립(孤立)한 멘델 집단(Mendel集團): 두 중심부 과학과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1932-1964」, 『한국과학사학회지』 37-1(2015), 345~382쪽.

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 과학사가 상정해 온 인종 과학의 역사적 궤적과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판이한 한국의 사례들을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종(race)’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및 동아시아 특유의 민족 담론과 그에 기반한 과학적 논의들을 조명함으로써, 기존의 서구 중심적 서사를 재구성하고 탈중심화하는 작업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¹⁵

또 다른 변화라면 저의 연구에서 한국사와 일본사, 그리고 해방 전후라는 공간적·시대적 경계가 점차 흐려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근현대 과학사를 연구하는 신진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한데요. 전통적인 한국 과학사 연구가 전체 해 온 일국사적 틀이나 정치사 중심의 단절적 시기 구분을 넘어, 지식과 실천의 연속성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1970년대 사이에 한국에서 자연 보존 개념과 환경 과학이 상호 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해 왔고, 한·일 조류학이 어떻게 공진화하고 분화되었는지를 탐구했습니다.¹⁶ 특히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전’의 개념적 구분이 일본 제국 시기의 경관 관리 관행에서 기원하여 전후 양국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은 제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15 Elise K. Burton & Sayori Ghoshal, “The History of Science through the Prism of Race,” *BJHS Themes*, Vol. 9(2024), pp. 207~223.

16 Jaehwan Hyun, “Reconfiguring Mountain Expeditions: The Transwar Origins of the Korean Nature Conservation Movement, 1926-1962,” *Korea Journal*, Vol. 62, No. 3(2022), pp. 79~115; Jaehwan Hyun, “Science as a Family Affair: Won Pyong-Oh and the Transwar Origins of South Korean Ornit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29, No. 1(2024), pp. 5~55; 원주영·현재환, 「『자연보존』을 통해 본 1970년대 자연보전 논의의 변화」, 『생태환경과역사』 12(2024), 73~115쪽; 현재환, 「응용의 기치에서 자연 보존으로: 한국응용동물학회의 활동과 개발주의적 자연 보존론의 출현」, 『한국과학사학회지』 48-1(2026), 29~62쪽.

물론 한국의 자연 보전과 환경 과학에 관한 초국적 역사가 모두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DMZ)가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국의 자연으로 표상되는 데에는 미국 스미스소니언협회 생태학자들과의 공동 생태조사가 놓여 있었고, 1960년대 한국 생물학자들이 전개한 국립공원 설립 운동과 실제 제도화 과정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생태 외교가 일정 정도 기여했습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최근의 초국적 역사 연구들이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를 문제화하기 위해 ‘트랜스 아시아(trans-Asia)’와 ‘관전사(transwar)’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와 시대라는 인위적 경계를 넘어 지식의 공동 생산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새로운 학문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¹⁸

마지막으로 제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주류 역사 서술에서 소외되고 잊힌 매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박사논문을 거치며 한·일 과학사를 교차하여 살펴보다 보니, 양국 과학사 모두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17 Jaehwan Hyun, “Brokering Science, Blaming Culture: The US-South Korea Ecological Survey in the Demilitarized Zone, 1963~8,” *History of Science*, Vol. 59, No. 3(2021), pp. 315~343; Jaehwan Hyun, “Negotiating Conservation and Competition: National Parks and ‘Victory-over-Communism’ Diplomacy in South Kore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 57, No. 2(2024), pp. 239~255.

18 Jaehwan Hyun & John P. DiMoia, “Korean Science since the Colonial Period: Environment, Medicine, and Technology in Transwar Korea,” *Korea Journal*, Vol. 62, No. 3(2022), pp. 5~19; Jaehwan Hyun & Kaori Iida, “Contested Collaboration at Boundaries: Transnational Science and Medicine in Cold War East Asia,” *Historical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Vol. 55, No. 2(2025), pp. 85~95. 관전사의 관점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 Reto Hofmann & Max Ward(eds.), *Transwar Asia: Ideology, Practices, and Institutions, 1920-1960*(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22).

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일 한인 과학기술자들은 양국의 학술 지형에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역사적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¹⁹ 이러한 과학 디아스포라들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학술적, 사회정치적 궤적을 복원하는 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인류세 위기에 대한 우려 가운데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나 초인간(transhuman)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녀에 관한 담론의 과학사적 기원을 탐구하는 연구 역시 이러한 매개자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적 담론 이면에는 사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한·미 해녀 생리학 공동 연구라는 과학적 층위가 존재합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신체적 탁월함이나 한·일 해녀의 생리적 차이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중개했던 의학자 홍석기와 같은 인물들을 추적하는 작업은, 제가 박사후연구원 시절부터 연구하려 했지만 여유가 없어 진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진행 중입니다.²⁰

서호철: 역시 최근에 직장을 옮기시느라 이력서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식 선생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종식: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소속 이종식

19 Jaehwan Hyun, "Reconstructing Identities amid Cold War and Postcolonial Politics: Zainichi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South Korea," *Historical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Vol. 55, No. 2(2025), pp. 96~127.

20 Jaehwan Hyun, "Rearticulating the "Primitive": The Sea Women and the Emergence of Trans-Pacific Physiology," *Historia Scientiarum*, Vol. 30, No. 3(2021), pp. 159~175; 현재환, 「1960년대 한미 협력 해녀 연구와 초국적 지식 생산」, 『인문학연구』 66(2026), 319~353쪽.

이라고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즈음부터 한국보다는, 한국을 잘 알기 위해 바깥에서 한국을 들여다보는 역방향의 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한국, 나에게 익숙한 한·미·일의 근대적 세계 말고, 중국이라는 타자의 세계, 사회주의권이라고 하는 타자의 세계를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부와 석사 모두 사학과에서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했습니다. 정치사·사회사·경제사, 어떻게 보면 역사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견지하며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 국가와 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무래도 장기 20세기의 중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른바 ‘삼농’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삼농이라는 것은 농민, 농업, 농촌을 말하고요. 이 삼농을 매개로 중국의 국가권력, 그리고 중국공산당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것인가, 중국 인민들을 더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그들이 갖는 세계의 생활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타자로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기저에 있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당이나 국가의 레벨에서는 ‘군중과학’이라는 프레임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천착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마오주의적인, 굉장히 독특한 비엘리트주의적인 과학철학에 입각해 과학 정책을 펼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²¹ 다른 한편으로 기층 사회의 인민들의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마오 시기에는 사적 소유를 배격하고 집체 소유 기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즉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라고 하는 세 심급의 집체

21 이종식, 「마오의 과학관과 그 영향」, 『과학잡지 에피』 31(2025), 30~39쪽; 시그리드 슈말저(저), 이종식·문지호(역), 『붉은 녹색혁명: 마오 시대 중국의 농업개혁과 군중과학』(서울: 푸른역사, 2025).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인민들이 농업 생산 활동을 해 나가는 가운데 주변의 식물, 동물, 자연 생태계와 나름의 관련을 맺으며, 또 특정한 농업과학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전유하며, 정치는 힘들지만 어쨌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게 박사학위논문의 요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²²

그런 의미에서 과학사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 과학, 농업 기술, 수의학, 동물학, 좀 넓은 의미의 생명과학의 역사 등의 각도에서 제 연구를 프레이밍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과학사 동료분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또 개변하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 보호하는 방식, 보살피는 방식, 이것들이 다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 부분, 권위 있는 언어이자 실체로서 과학이라고 하는 매개를 거쳐 이런 활동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경유하여 다생물종(multispecies)의 관계맺음과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꾸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의 역사,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성, 인류세의 위기 등의 테마들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심(과학, 삼농, 다생물종 관계)을 종합했을 때, 제 박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곧 출간될 저의 영문 단행본 『인민을 넘어서는 인민공사: 마오 시대 중국의 수의 노동자와 비인간 동물(*More-Than People's Communes: Veterinary Workers and Nonhuman Animals in Mao-Era China*)』의 기본 핵심 문제

22 Jongsik Christian Yi, “More-Than-People’s Communes: Veterinary Workers, Nonhuman Animals, and One Health in Mao-Era China,” Ph.D. diss., Harvard University(2022).

의식이 형성됩니다.²³ 저는 어떻게 보면 마오 시기의 코뮌이라고 하는 과거의 시공간이 앞으로 미래 지구의 상황을 반영하는 소우주일 수 있다고 봐요. 외부의(예를 들어 외계 우주로부터의) 물질적 지원 없이, 도움이 없이, 어떤 공동체에 부과된 최대한의 생태적 한계, 절대적 한계 안에서(지구라는 행성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공동체의 최소한의 재생산의 제반 조건을 스스로 허물어 쓰리지 않으면서 버티며 살아 나가야 한다는 바로 이 과제. 과거 마오 시기의 집체 공동체들이나 앞으로의 지구 공동체나 이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논리적으로는, 실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적, 마오주의적 과거를 단순히 긍정적으로 재해석한다, 수정주의적으로 재평가한다, 이런 차원에서 마오 시대를 재조명하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단 하나뿐인 공통의 생활 터전으로서 지구의 운명을 염두에 두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급자족을 이 행성의 한계 내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 물질적으로 화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에는 다소 비현실적이고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 안에서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과거 마오 시기의 행위자들이 자기 공동체에서, 자기 코뮌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티며 생존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상부 당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뮌의 구성원들은 이름 모를 잡초를 뜯어다가 돼지한테 먹여서 돼지가 싼 똥으로 퇴비를 만들어 한 해 농사를 짓고, 그렇게 주변의 식물과 동물과 환경을 공동체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대사의 일익을 담당

23 Jongsik Christian Yi, *More-Than People's Communes: Veterinary Workers and Nonhuman Animals in Mao-Era China*(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thcoming).

하는 존재로 간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안다는 것, 동물·식물·환경을 돌보는 법을 안다는 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하는 연결의 감각, 종을 초월한 공동체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지구의 구성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²⁴

동시에 저는 중국을 보기 때문에 일종의 타자 지향적인 연구를 해 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또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중국이나 동남아가 더 궁금해요. 더 타자 지향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학, 아시아학을 기웃기웃하고 있고, 역사학, 과학학도 마찬가지로 방법론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타자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현재 AI 시대 이후 중국 첨단 과학기술 정책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같은 문제들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저는 베트남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학을 일종의 제2의 전공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²⁵ 어떻게 보면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의 비중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그들의 자녀 세대와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안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이라는 타자도 점점 더 한국인에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학 안에서 혹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에서, 그것이 중국이 되었든 베트남이 되었든 혹은 제3의 국가나 문화가 되었든, 더 타자 지향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

-
- 24 이종식, 「코뿔은 무엇으로 사는가?: 1950년대 중국 광시 지역 농촌 공동체의 물질대사」, 『역사비평』 145(2023), 209~236쪽; Jongsik Christian Yi, "Rabbit Spleen and Medicinal Herbs: Animal Infectious Diseases, Grassroots Communes, and the State in Maoist China,"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 98, No. 2(2024), pp. 298~325; Jongsik Christian Yi, "Maoist Pigs: Swine, Communes, and the State in Rural China, 1949-1976,"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85, No. 2(2026), pp. 287~311.
- 25 Jongsik Christian Yi, "Dialectical Materialism Serves Voluntarist Productivism: The Epistemic Foundation of Lysenkoism in Socialist China and North Vietnam,"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Vol. 54, No. 3(2021), pp. 513~539.

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범주가 점점 더 다양성을 품어 가고 있거니와, ‘한국 내부’에 이미 ‘타자’나 ‘외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철: 굉장히 부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이 집이 좀 잘 살았거나 제가 어려서 좀 철이 들었으면 한국의 역사 같은 것을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관심 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구사할 줄 아는 게 한국말뿐이어서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 연구를 스스로 한국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서 좀 부럽네요.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네요. 먼저 한국에서 과학학을 한다는 게 뭘까, 또는 한국의 과학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해 보지요.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전혀 문외한인 입장에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화두는 노벨상입니다.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과학이란, 노벨상이 되거나 무슨 패러다임을 바꾸는 최첨단의, 일류의, 세계 정상의 업적, 뭐 그런 것이죠. 거기 비해서 한국의, 국내의 상황에 대한 통속적인 담론은, 선진 과학기술을 수입하고 모방하고 체화하면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됐다거나, 뭘 더 해야 된다가나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연구를 보면 주된 관심이 그런 것과는 꽤 거리가 있는… 물론 과학기술 정책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하셨습니다만, 복수의 과학이 있고, 또 그게 꼭 순위를 매겨서 노벨상감이라든지 세계 정상급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의 실천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과학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아주 넓혀서 일상생활의 지식이랄까 상식 가까운 것도 연구하시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생각

하시는 ‘과학’, 또 ‘한국의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의한을 좀 계몽시켜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해안을 보태 주시겠지만, 특히 최근 이종식 선생님이 편역하신 『서양과학은 없다』가 이 논의의 맥락을 짚어 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²⁶ 저는 한국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연구자로서 학문적 계보와 흐름에 대한 제 나름의 맥락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국 과학사학계에는故 전상운(1928~2018), 박성래(1946~),故 송상용(1937~2024) 선생님이라는 세 분의 원로 선생님이 계시고,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창설과 학문 후속 세대 배출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신 분으로 김영식(1947~) 선생님을 꼽습니다.²⁷ 김영식 선생님께서는 주희의 자연철학 연구에서 시작해 한국 전통 과학사로 연구 지평을 넓혀 오셨고, 송상용 선생님께서는 한국 과학사의 대중화와 제도화에 진력하셨다면, 전상운 선생님과 박성래 선생님은 한국 과학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천착하셨습니다. 특히 박성래 선생님은 16~17세기 서구 과학혁명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세계관 속에서 한국과 동아시아가 그 전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탐구하셨습니다.²⁸ 1990년대에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며 한국 사회 속 과학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셨던 것도

26 위릭 앤더슨(저), 이종식(역), 『서양과학은 없다: 탈식민주의 과학기술학의 도전』(서울: 이음, 2025).

27 임종태, 「한국 과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1960~1970년대 전상운 선생의 한국 과학기술사 서술」, 『한국과학사학회지』 40-1(2018), 159~173쪽; 신동원, 「박성래 선생님과 한국과학사」, 『한국과학사학회지』 26-2(2004), 131~138쪽; 김상현, 「과학적 휴머니즘에서 비판적 과학학까지: 송상용 선생의 지적 여정」, 『한국과학사학회지』 47-1(2025), 65~86쪽; 김영식, 「김영식, 삶과 학문」, 『한국과학사학회지』 35-1(2013), 245~286쪽.

28 임종태, 「과학사 학계는 왜 실학을 저평가해 왔는가?」, 『한국실학연구』 36(2018), 677~699쪽.

이러한 맥락입니다.²⁹

당시의 민족과학 담론은 이후 세대에게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를 비판한 세대의 연구자들 역시 ‘세계적인 과학자’나 ‘노벨상급 성취’를 발굴하거나 ‘왜 한국 과학이 서구의 성취를 신속하게 추격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서구 중심적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특히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근현대 과학기술사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선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학문적 전환을 꾀한 것은 2000년대 초중반 문중양, 임종태 선생님을 비롯한 전통 과학사 연구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³⁰ 이 시기부터 전통 과학사에서 시작해 점차 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자들도 서양 과학을 거울삼아 우리를 평가하려던 타자화된 시선을 인지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서구 과학사 학계에서 주류화된 사회사·문화사적 전환(contextual turn)을 한국적 지형에 본격적으로 접목하며, 한국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과학기술 활동을 살피는 연구들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³¹

그 결과 서구적 기준에서 돋보이는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라는 구체적인 시간간 안에서 당시의 역사적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29 박성래,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박성래 교수의 민족과학 이야기』(서울: 교보문고, 1998).

30 문중양, 「전근대라는 이름의 뒷에 물린 19세기 조선 과학의 역사성」, 『한국문화』 54 (2011), 99~130쪽.

31 이런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로는 다음을 참고. 임종태,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파주: 창비, 2012).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된 집단적 학술 작업으로는 2022년에 30권으로 완간된 〈한국과학문명사 총서〉를 참고.

게 여겨지고, 당시의 맥락에서 의미 있게 작동했던 과학기술 활동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사적, 문화사적 접근에 더해 물질성과 젠더, 비인간 환경과 동물 등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춘 연구 성과들이 증가했습니다.³² 제가 속한 연구 세대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법이 이미 풍성하게 자리 잡은 토대 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천: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옛날 고전적인 과학적 서술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 오브 아이디어(history of ideas) 하던 시대에 사상사를 하던 분들이 과학사 서술을 할 때는 특정한 인물들의 계보를 쫓 그려 놓고, 예를 들어 물리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에서 뉴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각각의 과학적 영웅들이 등장해 어떻게 사상들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천문학의 흐름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꿔 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전 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들을 보면 약간 맥락과 무관하게 사상의 변화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고전적 서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뉴턴이라든가 갈릴레오 같이 뛰어난 사람들 위주로 서술할 수밖에 없고, 연구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 내는 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서술하는 거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주로 좌파 쪽에서 그렇게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는 마르크시스트 연구자들이 그런 위대한 대상들만 볼 게 아니고 일상적인

32 이정, 「물질, 삶과 만나는 변방의 낯선 과학」, 『역사학보』 247(2020), 489~512쪽.

삶을 영위했던 장인들이라든가, 기록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유리를 세공해서 만들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인들의 전통이 사실은 실험 과학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사상사의 흐름과 반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서 사실 저희가 배울 때쯤 되면 사상사 흐름은 좀 옛날, 좀 올드 한 흐름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인상적인 변화의 순간만을 생각하는 게 과학사나 STS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냐.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더 중요한 순간이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테넌스, 즉 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과학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활동인데, 그것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인상적인 과학자라기보다는 테크니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도 눈길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문제의식 자체가 되게 다양화되었고. 꼭 노벨상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과학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사람 이외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사물들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뺏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라디오를 고치다가 개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작은 혁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을 연구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해졌고, 한국 혹은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환

경에 맞게, 혹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혹은 그 지역에서 가용한 자원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유통되는 지식이 있고, 때로는 첨단 기술이라는 지식이 들어와 봤자 그게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작동하게끔 바꿔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노벨상 못 받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고, 오히려 더 위대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 받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과학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 연구를 더 지원해 달라, 더 자유로운 연구를 하게 해 달라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사실 노벨상을 받지 않아도 주는 오르고 있고, 사회는 잘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문제의식 자체가 노벨상 하나만 보던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유정: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과학사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사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행위자들 또는 주목하지 않았던 실천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꾼 순간들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소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탁월한 우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꼭 노벨

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선 노벨상이라는 제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³³ 지금의 과학 활동들은 단순히 단독 저자로, 즉 혼자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공동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제 과학 현장의 모습과 다르게, 어쨌든 그중 한 명을 뽑아서 그 영광의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노벨상 제도이고, 그래서 과학계 내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된 리터러처(literature)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 이야기를 했드시피, 사실 노벨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인 권위를 따기 위해서라도 과학자들은 과학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³⁴ 왜냐하면 보수가 그리 크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런 노벨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작동하는 무언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과학자 사회 내에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탐구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정교하게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³⁵ 일단 그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서호철 교수님께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당장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굉장히 탁월한 과학자들이

33 예를 들어, Robert Marc Friedman, *The Politics of Excellence: Behind the Nobel Prize in Science*(New York: W H Freeman, 2001); Gustav Källstrand, "Science by Nobel Committee: Decision Making and Norms of Scientific Practice in the Early Physics and Chemistry Prize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 55, No. 2(2022), pp. 187~205.

34 레슬리 스티븐슨·헨리 바이얼리(저), 이상원(역), 「무엇이 과학자에게 동기 부여하는가?」, 『과학의 여러 얼굴: 과학자, 가치, 사회 입문』(파주: 한울엠플러스, 2021), 70~84쪽.

35 이와 관련하여 김동광·김환석·조혜선·박진희·박희제, 『한국의 과학자사회: 역사, 구조 사회화』(서울: 궁리, 2010) 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한국에서 볼 만한 과학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에디슨, 아인슈타인, 어느 누구를 대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위해 공부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부터 사실 그들은 결국 그들 주변에 있는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던 역사인 것이거든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예전부터 결국에는 기본적인, 과학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우리 주변의 자연에 대한 더 나은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공학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입.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백 투 더 베이적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지구는 둥글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있고, 유럽에 있는 잎사귀와 동남아에 있는 잎사귀들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하늘도 다르고, 저기서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자연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간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과학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선 저는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갖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러면 사실 노벨상을 받은 분들을 보면 다 면면이 훌륭한 분들이죠. 물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훌륭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소위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을 노벨상 수상자들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떻게 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기존의 어떤 연구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고, 전

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언제, 어디서 노벨상이 터질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이 다시 이렇게 부활할 줄도 몰랐고, 왜냐하면 신경망 네트워크는 다 죽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학상 받은 MOF 같은 경우도, 금속-유기 골격체 같은 경우도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연구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과학자들이 노벨상 때문에 연구한 것도 아니지만, 노벨상을 놓고 보더라도 무엇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과학 활동들에 대한 주목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기에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수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 그것도 사회적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투자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만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식: 현재환 교수님, 강기천 교수님께서서는 과학사의 사학사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학이 명사에서 동사가 됐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학이 시간에 매이지 않으며 장소가 없는 일종의 추상적 사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는, 굉장히 맥락 특수적인 실천으로 전환되었다, 과학사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과학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시간과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는 지식과 실천으로서의 과학에 관한 역사인 것이고, 이것은 무궁무진하게 연구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가 있든 없든. 그런데 동시에 신유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성과 비가시성만큼이나 수월성과 혁신에 대해 여전히 주목할 필요는 있다. 비서구 과학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정작 서구 과학사를 모르거나 경시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노벨상의 상징적·문화적 권위를 회구하는 과학기술인들이 현장에는 여전히 굉장히 많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일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맥락과 무관하게 주변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기술의, 일종의 보편적인 동기, 혹은 호기심과 궁금함 자체라고 하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한국적 과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라는 시공간을 중심에 놓고, 신유정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보편적 혹은 일반적인 차원의 과학에 대한 접근과 강기천, 현재환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맥락 특수적인 접근을 조화시켜 나가는 지적 노력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호철: 두번째 질문인지 같은 질문을 반대쪽에서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근현대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에 대해 말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의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서양 과학의 틀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전근대를 공부했으면, 시현력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천문학적 역법(曆法) 계산이고 어디부터가 술수(術數, numerology)이거나 (미신적인) 역주(曆注)냐 하는 문제가 있죠. 전통시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술수나 풍수, 한의학 등도 다룰 수 있다면, 지금 선생님들이 꼭 무슨 세계 과학계를 선도하는 탁월한 성과가 아니고 그런 과학과 우리 일상 사이에 놓인 과학 활동에 주목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학’이라는 말은 이미 뭔가 어떤 테두리를 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닐까요? 술수나 풍수는 이미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좀 강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정말 노벨상처럼 자랑하고 싶은 성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게 한국의 과학일까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인에 의한 과학? 아니면 미국처럼, 이번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조건이 좋으니까 전 세계의 똑똑한 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런데 한국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인문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가 하든 한국어로 쓰인 것은 한국의 문화자산일 텐데요. 외국인 아이들에 의한 K-pop… 과학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조금 황당한 질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의 과학’의 테두리를 그려 본다면 어떨까요?

현재환: 사실 이 질문은 사례와 맥락에 따라 답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 오늘날의 대부분의 과학사 연구자들은 ‘한국 과학’이라는 것이 고정된 본질을 지닌 실체라고 전제하지 않고 이를 단일하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 과학’의 범주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술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근배 선생님은 과학의 수행 주체를 ‘한국인’ 인가를 기준으로 한국 과학을 정의하고 연구해 오셨습니다.³⁶ 이 관점에서는 식민지 시기 경성제대 예과 교수였던 일본인 학자 모리 다메조[森為三](1884~1962)의 연구는 한국 과학이 아니지만, 동시대 제도권 밖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자연과학자들의 활동은 한국 과학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제가 연구에서 견지하는 입장은 행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호명했는지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가령 일제강점기에

36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서울: 문학과학사, 2005); 선유정·김근배, 「근현대 한국 과학기술사에서 인물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43(2021), 237~266쪽.

모리 다메조가 자신의 연구를 ‘조선의 과학 연구’라고 명명했다면, 저는 그것 역시 한국 과학사의 범주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1950~1970년대 남북한의 과학자들이 ‘한국 과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호명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실체화되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즉, ‘한국 과학’의 정의를 선험적으로 내리기보다 행위자들이 그 실체를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제가 ‘민족우생’ 담론이 의과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과학’으로 정당화되었는지 살피거나,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승공 외교라는 맥락 속에서 국립공원 제도가 어떻게 호명되었는지를 과학사의 주제로 분석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³⁷

신유정: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사실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 과학이 무엇이나고 정확한 에센스를 찾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이 실제로 한국적인 것을 되게 강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 연구를 보면, 한국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인삼을 바탕으로 신경 활성 물질들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한국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굉장히 약(drug) 중심으로, 인디비주얼 타깃 중심으로 연구한다면, 한국에서는 좀 더 통섭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들을 강조할 때 한국적인 방법, 아시아적인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전근대 같은 경

37 현재환, 「해방 이후 한국의 ‘민족우생’론과 의과학자들, 1945~1964」, 『사회와역사』 136 (2022), 55~92쪽; Jaehwan Hyun, “Negotiating Conservation and Competition: National Parks and ‘Victory-over-Communism’ Diplomacy in South Kore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 57, No. 2(2024), pp. 239~255.

우에는, 물론 그때도 세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근대적인 어떤 세계관 레벨에서의 차이들이 있고,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근현대에 와서는 좀 더 세밀한 데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학 활동을 할 때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떤 실험 도구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세세한 차이들에서 과학자들이 ‘한국적’이라는 말을 쓴다든가, 그렇다면 그것 역시 분석의 대상일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을 좀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장하석 교수님께서 쓰신 『새로운 실용주의 과학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³⁸ 사실은 다원주의(pluralism)라고 하는 말이 과학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종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구를 다양한 종들과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과학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했을 때 다원주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던 과학의 역사에 대해 고민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과학 지식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 이런 질문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 저도 한마디 거들면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치 약간 “K-pop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거 같아요. 외국인 작곡가가 작곡하고, 가사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나오고, 멤버도 다국적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과연 K-pop인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근배 선생님의 작업이 언급되었지만, 한국

38 장하석(지), 전대호(역), 『새로운 실용주의 과학철학: 현실적인 사람들을 위한 실재론』(파주: 김영사, 2026).

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호명된 사람이 주로 한국이나 혹은 서구 등에서 수행한 연구를 한국 과학이라고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한 교수님 덕분에, 또 다른 더 젊은 세대 중 훌륭하게 연구에 개입하고 있는 분들 덕분에 한국인으로 판명되지 않은 주체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생각을 존중해서 그들이 일본인이지만, 미국인이지만 한국을 위해 혹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과학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당연히 한국 과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체를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다 포괄하는 데로 간 논리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 공간의 확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주체를 한국인으로 좁혀 볼게요.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 한국과학기술사나 한국과학기술학이 굉장히 연구적 노다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야는… 한국인 과학기술인들이 서구라고 하는 과학의 본고장이 아닌, 비서구 혹은 주변부, 지구의 과학적 세계 주변부, 근대 문명의 주변부에서 했던 과학기술 활동이 되게 많아요. 중동에 가서 뭔가 대형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전쟁 중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예전에 청계천 고가처럼 굉장히 큰 주요 간선도로를 한국 건설사가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과자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섬이 많은 나라들에 가서 그냥 섬 하나를 사 버려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생활과 생태 조건을 무시하고 팜유를 뽑아내기 위한 플랜테이션만 짝 깔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국 과학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껍판을 치는 일이라고 보고,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한국 과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 파악하고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인이냐 비한국인이냐라는 주체 차원에서의 확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인이 한반도 혹은 과학의 중심부 말고 주변부에서 했던 과학기술 활동도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동남아시아학이라든지 남아시아학이라든지 라틴아메리카학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혹은 중동 이슬람학 같은 데와 한국학은 정말 연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덧붙이고 싶은데, 후자에 대해서 국외에서 한국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목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데르스 릴 뮐러(Anders Riel Müller, 송연준)라는 선생님은 육류 소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 중심 농경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지의 해외 토지를 징발해 사료 작물을 재배하고 한국에 공급하는 상황을 지적하는데, 이는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의 책임을 이들 지역에 전가하는 일종의 탄소 식민주의(carbon colonialism)로 읽을 수 있습니다.³⁹

국내 과학사학과와 국사학과 역시 초국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견지하고는 있으나, 주로 지식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식의 공급처인 일본, 미국, 유럽 등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피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서구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자원을 추출하거나 추출주의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근현대 동아시아 과학사가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따라 중국 과학사와 비중국 과학사로 상당히 분절되어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특히 공산권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루어진 중국 내 한국인 과학자들과나 북한 과학자들의 활동은 앞으로 개척해야 할 중요한 학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39 Anders Riel Muller (Yeonjun Song), "Rice Fields, Mountains, and the Invisible Meatification of Korean Agriculture," in David Fedman, Eleana J. Kim, and Albert L. Park(eds.), *Forces of Nature: New Perspectives on Korean Environment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pp. 109~121.

이종식: 해외로 나갔던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국으로서의 한국학’의 결과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의 자리, 약자의 자리에 한국을 놓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한국을 강자, 중심부, 제국의 위치에서 놓고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현재환: 아무래도 한국 과학을 정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결국 한국은 무엇이며 과학은 또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학이라는 범주 자체가 매우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전근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구 대상의 범위는 더욱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풍수(風水)를 과연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과학자들에게 풍수가 과학이냐고 묻는다면 대개는 고개를 가로저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 한양 천도 논쟁에서 풍수는 자연을 이해하고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정교하고 진지한 지식 체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풍수지리가 자연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방식이었다면, 과학사 연구자로서는 이를 당대의 자연 지식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의 정의를 현대적 기준에만 국한한다면, 과거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연구했던 방식들을 그저 비과학적이라는 카테고리에 밀어 넣어 역사적 맥락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범주 역시 시대마다 그 성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나 조선처럼 한반도 내에 명확한 국가가 존재했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발해나 삼국시대로 올라가면 고구려의 정체성 논란처럼 복잡한 지점이 생깁니다. ‘국사’의 관점에서는 고조선부터 이어지는 한국사라는 일정한 범위를 설정해 두고는 있지만, 이는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합의와 맥락 속에서 도출된 인위적인 카테고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과학의 정의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주체를 기준으로 삼거나, 한국이라는 이름을 내건 활동에 주목하거나, 혹은 한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행위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세계를 어떻게 나누어 보았는지 그 맥락을 좇아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영: 사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국학에 대한 질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컨대 한국을 소재로 했느냐, 한국인이 한 것이냐를 넘어서는 탈중심적인 한국학이랄까, 한국을 넘어서는 한국학이라는 것의 비전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인 연구자로서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타자들을 지향했던, 그런 지식을 추구했던 이러저러한 사례들, 반대로 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국에 버금가는 아(亞)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기술이나 지식을 다른 사회에 과급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활동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의 한국학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한국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딜레마라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실은 한국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가령 저는 최근에 어떤 과학사 분야의 석학께서 하시는 기조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과학사를 넘어서는 좀 더 넓은 과학사의 학문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계셨고, 특히 동아시아적 맥락을 통해 기존의 과학사 분야가 암암리에 상정하고 있던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했고 그 대체적인 취지에 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사실 들으면서 살짝 불안

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100% 기우(杞憂)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전의 과학사가 지나치게 과학을 좁게 보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런 접근처럼 과학을 너무 확장적으로 해석한다면 과연 과학사는 기존의 문화연구나 지식사회학 작업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탈(脫)서구화를 위해 아시아적 맥락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리어 맥락에 대한 지나친 수궁(首宮)이랄까, 또 다른 환원론으로 기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 ‘탈중심화의 시도’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경계를 해체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 그런 해체가 역으로 자기에게 되돌아오면서 생기는 딜레마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탈서구화를 시도하는 동아시아과학사’도 그렇겠지만, 한국학이 기존의 한국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중심적인 한국학’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민족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 중심적인, 아주 좁은 의미의 한국학 혹은 과학사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 이게 분명히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런 자기 경계가 뭐냐”라는 질문들, 이렇게 경계가 흐려진 상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또 다른 몫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난제를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제도적으로 내가 과학사다, 내가 사회학이다, 내가 역사학이다 등등 분과학문의 제도 뒤에 숨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한국의 학계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벽들을 더욱 강화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낳는 것이겠고요.

신유정: 딱 그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술대회에 갔어요. 탈중심적인 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한마디로 과학사 주제가 아니었던 것도 과학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한국학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한국학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접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공통의, 되게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 분을 뵈는데, 과학사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비슷한 대상을 보고 있고, 비슷한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어긋나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그것을 통해 결국 내가 더 보고 싶은 게 한국 사회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 내가 더 보고 싶은 게 과학 지식의 본질에 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탈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연구 대상을 넓히고, 그러다 보니 중첩되고, 이러면서 ‘우리 모두 유사한 것을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서 결국 그것을 통해 보고 싶은 게 뭐야? 딱 어디서 달라지는 것 같냐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과학사인데 사이언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 사이언스로 시작해서 한국 사회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학사 입장에서 궁금한 건, 사이언스 쪽으로 조금 더치를 해 주기를 원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훨씬 더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더 넓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좁게 제가 천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탈중심을 피하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넓히되,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을 좀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재미없다”라는 코멘트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정준영: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고, 혹시 아마 서호철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학이고 어찌고저찌고하면 제 주변의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무슨 사회학이세요? 역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가 왜 자꾸 사회학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 많이 듣는데,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좋다. 알겠다. 그럼 내가 너희 사학과에 지원을 하마. 너희가 받아 주면 내가 역사학자이고, 받아 주지 않으면 역사학자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환 선생님께서 철학과의 교수로 가신다기에 약간 감개무량하다는 느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탈중심화 속에서 이상하게 제도만 강화되는, 이상한 지금의 상황들은 확실히 문제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유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로서의 한국’ 이냐, ‘과제로서의 한국’ 이냐, 결국 마지막 슬라이드 이야기가 명확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분과학문의 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게 아닌 방향으로 가면서도 그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는 차이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사에서도 과제일 뿐 아니라, 한국학에서도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정: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으로 제가 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만났던 분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좀 더 풍부해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준영: 카이스트로 가신 이종식 선생님도 그렇고, 한양대로 가신 현재환 선생님도 그렇고. 한국의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이것이 일종의, 지금의 분과학문 중심의 학과제 장벽을 깨는, 굉장

히 중요한 기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종식: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개개인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자기 학문 세계에서 궁극의 설명의 대상이 뭐냐, 가장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그 최종 심급. 사람들이 그것을, 특히 대학원생들은 그에 대한 자기 이해가 (결여되었다고 하면 좀 너무 표현이 과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일단 본인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는 여러 분과가 있고, 여러 학회가 있고,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너무 배척되고, 제도의 벽이 강화되면 안 되겠지만, 연구자 개개인으로서의 그 차이들을 파악해 가며 센스 있게, 여기 가서는 이런 청중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 중요하게 생각할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청중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드 전환이 잘 되는 후속 세대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영: 말씀하신 게 자기 정체성이 있되, 오디언스 지향적인.

이종식: 그래서 뭔가 여러 개의 동심원들이 서로 교집합을 만들면서 있고, 그 점점의 중심 또는 중간에서 자기만의 “난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고, 규명하고 싶은 최종 심급의 연구 목적은 이거야.”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저는 제도의 벽, 학회의 벽, 분야의 벽,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개개인의 개인기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그 파도를 넘어가는 일도 해야 되는 것 같다,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서호철: 이야기가 한창 재미있어지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 걱정을 해야 할 형편이네요. 이번에는 거창하게 말하면 앨런 소칼(Alan Sokal)이 도발한 ‘과학 전쟁’같은 이야기인데요.⁴⁰ 저도 사회학과 역사 사이에 끼어 있는 분야다 보니 어떨 때는 사회학과에 가면 더 어색해요. 그런데 과학기술연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과와 이과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그걸 공부하려면 요구되는 것도 굉장히 다른데. 혹시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서러움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 뇌과학이나 양자역학의 ‘연구’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까? STS 연구자들은 역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적 방법을 가지고 거기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쪽에서는 “네가 뇌과학에 대해서 알아? 랩에 있어 봤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인문 쪽에서도,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자료는 봤냐? 한문 읽을 줄은 아냐?” 이런 것도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큰 거잖아요. 자료 발굴도 큰일이고, 손으로 쓴 개인 문서를 읽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데서 느꼈던 애로라든지. 아까 국면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얼굴을 바꾸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신유정: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까 교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의 대학원

40 20세기 말 과학에 대한 역사적·사회과학적 접근은, 과학지식도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된 다거나 진리란 결정적 관찰·실험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이데올로기의 산물 이거나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 대해서 일부 자연과학자들은 그것은 과학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그중에서도 1995년 물리학자 소칼이 ‘양자 중력’을 다룬 난해한 논문을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는 학술지 *Social Text*에 투고한 다음, 실은 그 논문이 완전히 날조된 것임을 폭로한 사건은 유명하다. 그런 정도의 날조도 걸러내지 못하면서 과연 자연과학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는 주장이었다. 소칼 사건에 대해서는 홍성욱, 「누가 과학을 두려워하는가?」,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서울: 문학과학지성사, 1999), 95~100쪽 참고.

지도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뇌과학 분야를 박사논문 주제로 잡을 거면 관련 수업을 최소 몇 개 이상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뇌과학 분야 교수님의 수업 청강을 쫓, 조금 했었거든요. 뇌과학 분야가 좀 여러 개라서 뇌과학, 뇌공학 몇 개로 나뉘 가지고 몇 개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거의 사료 읽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도메인 과학에 대해 과학자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지만, 기본 베이직 랭귀지는 좀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저는 그게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 읽어 봤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학위과정 중에 서러움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전북대학교 과학학과에 와서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학과가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저 학과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대충 아시는 거예요. 적어도 전북대 내에서는 과학사 또는 과학학이라고 하는 게 뭘 하는 학문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더라고요. 은퇴하시는 교수님들이 과학학과의 문을 푼 푼 노크하셔서 “내 자료 안 가져갈래요?” 몇십 년 동안 모아 놓은… 실제로 현재 전북대 교수님들, 은퇴하시는 교수님들 몇 분의 자료를 모아서 아카이빙하고 있는 작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북대 내이지만, 결국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과학사라고 하는 학문은 이런 학문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통을 통해… 그러니까 인포멀한 네트워크를 통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포멀한 네트워크를 통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쌓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한 가지 실질적인 서러움?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신청하고 심사 평가받고 이럴 때, 어려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환: 저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신유정 선생님과과는 정확히 정반대의 경로를 밟았습니다. 인문계열 학부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에서 과학사를 전공하게 된 사례인데요. 당시 제가 다녔던 대학원 협동과정은 이공계 출신과 인문계 출신의 비율이 대략 8 대 2 정도로, 저 같은 인문계 졸업생은 늘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워크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정반대의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네가 역사서술 방법론적 쟁점들을 잘 이해하거나 이론적 틀은 잘 잡을지는 몰라도, 화학 구조나 화학식을 읽을 수 있느냐” 혹은 “텍스트에 담긴 과학적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제와 별개로 “네가 과학을 알아?”, “네가 과학에 대해 말할 권위가 있어?”라는 물음에 시달렸어요.

최근에는 변화의 추세가 보이기는 해도, 과학사를 하려면 모름지기 학부는 이공계를 나와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공계 학부주의는 문·이과의 경계에 놓인 소수 학문으로서 과학사라는 분야가 생존하기 위해 선학들이 펼쳐 온 일종의 ‘정체성 정치’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배경을 일종의 자본으로 활용해 ‘인문학 속의 과학자’ 내지는 ‘인문학을 잘 이해하는 과학자’라는 정체성으로 학문적 공간을 확보해 온 것이죠. 저와 같은 인문사회계 출신들이 이 분야에서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 낸다면, 이와는 또 다른 정체성 정치의 공간이 열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제가 문·사·철 출신으로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겪는 제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의 수업 한두 과목을 듣는다고 해당 주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모두 꿰뚫고 역사 논문을 다루는 건 난망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생물학, 그 중에서도 인류학과 유전학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전학이라 하더라도 양적 유전학이나 유전체학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또 학위논문을 쓰기 전에도 그렇고, 쓰고 나서 학계에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도 그렇고, 저의 인문학적 배경을 근거로 과학사상사를 전공하거나 과학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학자로서 연구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라는 주변의 기대도 느낀 것 같네요. 말이 길어졌는데, 요컨대 과학사라는 학문 자체가 경계에 위치하듯, 연구자 개개인 역시 자신의 출신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 정치와 구조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생소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것을 저는 반박하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런 전체를 깔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뭉뚱그려 ‘문과’, ‘이과’ 백그라운드로 이분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유정 교수님도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학위논문 주제로는 뇌과학을 연구하셨습니다. 같은 이공계 학문이라지만 기계공학과 뇌과학의 차이도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강기천 교수님을 예로 들면, 학부 전공으로 수학을 하셨는데, 강 교수님이 만약 생태학의 역사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또한 이공계 안이지만 배경과 전문 연구 분야 간의 접점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도 이과 나름인 거죠. 본인의 학부 시절 세부 전공을 줄곧 떠나지 않고, 그 학문의 역사나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학부 교육의 메리트는, 적어도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고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요.

저에 대해 말하자면, 저도 현재환 교수님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도 일반 생명과학, 유전학, 이런 수업들을 유학 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들이

수강해야 한다고 권유해 주셔서 뒤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유정 교수님의 지적, 현재환 교수님의 이런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저 또한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과, 문과라고 하는 학부 출신 배경 중심의 구별에는 함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묘하게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수능 시스템에서 문·이과를 나뉜 세월이 길다 보니...

예컨대 미국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 전공이 전공이 아니잖아요. 하버드의 예를 들자면, 하버드의 모든 학부생은 4년 동안 어느 학과(department)에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생들의 소속은 일괄적으로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산하의 하버드 학부대학(Harvard College)이 되고요. 교양 학수번호의 교과목과 여러 레벨의 전공 학수번호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합니다. 그리고 추후 자신이 역사학 과목을 몇 학점 이상 들었으면, 그 학생은 역사학을 자신의 ‘컨센트레이션(concentration)’으로 선언(declare)합니다. 동시에 그 학생이 뇌과학을 소정의 학점 이상 이수했다면, 그는 뇌과학도 이중으로 컨센트레이션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문·이과의 벽, 전공의 벽이 적어도 학부 교육 수준에서는 강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부 레벨에서 학과 단위 혹은 문·이과 단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해외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문·이과 출신론’이 각 학문 분야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케이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학 시절에 MIT에서 온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서 항공우주의 역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과학사 전공 필수 세미나 첫 시간을 마친 후, 이 친구가 혀를 내두르면서 자기는 태어나서 350페이지짜리, 사진과 그래프가 전혀 없이 글씨로만 가득 찬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를 어떻게 읽는 거냐, 더욱이 일주일에 이런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한다는 말이나.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공계에서 과학사로 넘어올 때 오는 하나의 애로사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학부 전공이 인문계라고 해서, 사학과 출신이라고 해서, 혹은 사회학과 출신이라고 해서, 대학원 레벨에서 300페이지, 350페이지짜리 텍스트를 제대로 정독할 수 있는 역량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본인이 저자로서 박사논문이나 단행본을 써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 이런 읽고 쓰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문과 전공 학부 출신이라고 그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이과 학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담론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등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쪽 백그라운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사례와 맥락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담론이 보여 주는 것은 우리 학계의 가난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혹은 외국 학계에도 있는 가난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문·이과 학부 배경으로 이러쿵저러쿵 재단한다는 것도 어찌면 남, 동료, 후학의 장점과 가능성을 봐주기보다는 단점을 들춰내 지적하고, 그렇게 남보다 나를 높이고 싶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학과 후학에 대한 동료애와 연민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학계를 막론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과학사처럼 여러 가지 기존 학문의 경계 사이에 끼어 있는 분야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선배 세대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면, 지금 세대부터는, 우리가 제자 세대의 학생들을 대할 때에는, 진실로 저는 그것이 중요한 마음이 짐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재환: 지금 정말 따뜻한, 그리고 깊이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과와 이과의 경계가 본질적으로 실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신진 연구자가 학자로 성장하거나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제 학부의 세부 전공이나 대학원의 연구 주제와 관련 없이 소위 ‘이과 출신’임을 내세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나 과학기술학 연구에서의 전문성을 더 설득력 있게 인정받으려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다중 전공했다는 사실을 저만의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자본으로 활용해 왔고요. 이러한 인문학적 배경이 제가 현 직장에서도 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개별 연구자의 ‘이공계/인문계’라는 이분법에 따른 출신 배경은 학계 내에서 학문적 권위를 형성하고 새로운 틈새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도구인거죠.

이종식: 그것 또한 실존하는 거죠. 엄연히.

서호철: 한 가지만 여쭙보면, 두 분 선생님들은 한문, 한자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유정: 아까 전근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한자 급수를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중국어를 부전공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저 이후에 중국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좀 중국 붐이 있어서.

서호철: 한국에서 한문, 한자 교육 시스템이 좀 특이하잖아요. 정규 대학 과정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고전번역원이나 서당을 몇 년을 다닌다든가부터 시작해서. 또 한문을 읽는다는 게 손으로 쓴 글씨까지 가면….

강기천: 전통 과학사를 하는 친구들은 한문을 읽어야 하니까 서당을 다녔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강독회 같은 걸 해서 한문을 같이 읽는다거나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읽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6차 교육 과정인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한자 배운 것 정도로 신문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한문 혼용체까지는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모르면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옥편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하는 정도였고. 한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전통을 전공했다면 따로 배워야겠죠.

현재환: 과학사나 과학학 협동과정에는 한문을 강독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 됐어요. 10년은 됐어요.

강기천: 그게 반쯤은 수업처럼 굳어져 있어요. 비교과이긴 한데.

현재환: 저도 두 학기 들었는데 전혀 안 늘더라고요.

이종식: 약간 여담인데 저도 그런 거 했습니다. 저도 사학과 대학원생 시절에 학과의 오랜 전통을 따라 일종의 비교과 활동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중국의 정사 24사를 무한 반복하는, 수십 년 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평준서(平準書)를 완독하면 『한서』 식화지(食貨志)를 읽고, 그렇게 『청

사고』까지 가고, 다시 『사기』로 되돌아오고, 이 반복과 순환을 몇십 년간 하는 모임에 저도 함께했죠.

장기천: 저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수리과학부를 나왔다 보니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공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장벽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훨씬 더 환대해 줍니다. 동질감. “애는 그래도 수학적 언어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상담해 줄 때도 이공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외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뭔가를 풀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외워라. 왜냐하면 수학과 일종의 언어이고, 과학, 물리학도 언어잖아요. 그 업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일단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시작해야 그다음에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그 단어랑… “그 정의랑 정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너의 논리를 풀어 쓸 수 있으면 그게 네가 수학을 할 수 있고 물리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사람들은 약간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수학을 배웠다 그러면 일단 마음의 장벽이 확 낮아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요. 훨씬 더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는 저도 공대… 은퇴한 교수님들 딱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수리과학, 수학과 전공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냐고 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 보죠. 유전학 얘기를 하면서 “방정식을 한번 얘기 해.” 그러면 방정식을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했다고 남의 사료를 읽는 데 더 유리한 입장이냐, 그건 아닌 게 수학을 했다고 물리학 논문을 봤을 때 그 단어와 표현들이 익숙하냐, 그렇지 않아요. 물리학하고 수학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환대해 준다는 거죠. 마음의 장벽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신유정: 문·이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 한말씀만 보태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타인을 라벨링하는 기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결국 내가 어디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까 이종식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결국 다양한 오디언스에 맞춰서 그런 걸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디언스가 어떤 오디언스인지를 파악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학제의 학문을 하면 할수록 그런 성찰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되게 STS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위치되어 있는 곳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 고질적으로 있는 문과, 이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사학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과학자시네요”인데요.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전히 문과라는 단어가 됐든, 이과라는 단어가 됐든 사회적 자본으로 많이 쓰이는데, 만약 사회적 자본으로 이야기할 거면,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서울과 지방,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다른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게 문과를 나왔든, 이과를 나왔든 서울대를 나온 것과 어디 다른 대학을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후속 세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서호철: 선생님들이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사회과학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과학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자연과학인 것이지, 사회과학을 염두에 두면서 ‘과학과 무엇’, ‘과학과 한

국학’,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암묵적인 가정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재미있는데, 벌써 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업상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한국학』에 투고하시라고 하면… 농담입니다. 투고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과학학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있는 학문이지만 글쓰기 자체는 굉장히 인문학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 열 명이 팀을 짜서 제1저자, 교신저자 넣어 가지고, 그런 거는 없죠? 다 자기 글을 쓰는 거고, 글 쓰는 스타일도 굉장히 역사 논문 쓰는 스타일로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들이 쓴 글을 봐도 몇몇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제가 예상치 못했던 순우리말 표현, 세련된 수사학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해 주시죠.

현재환: 저는 제 연구들이 역사적 글쓰기의 범주 안에 있다고 스스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어떤 대조되는 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관전사(transwar) 접근 등을 이야기하면 이공계 출신의 ‘정통’ 과학자 선생님들은 인문계 출신이라 그렇다는 농담을 종종 하십니다. 어찌 되었든 글쓰기와 관련해 질문해 주셨지만 글쓰기의 양식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누구를 참조하고 인용하는가라는 지점에서 최근 한국학계의 흐름을 보며 느꼈던 소회를 조심스레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근 근현대 한국사 연구자 분들이 환경이나 과학기술, 의료 분야의 주제를 활발히 다루기 시작하셨는데, 이는 정말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 분야에서 그간 오랫동안 쌓아 온 논의의 지형이나 연구 축적이 때로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해 못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칫 이 영역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무주지’인 것처럼 비치는 경우

도 있는 것 같아서요.

간혹 역사학계 일각에서 과학사 분야의 저술들을 두고 “역사 서술 방법론이 없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사에 학술적 궤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일반 역사학과는 조금 다른 맥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장기간 논쟁을 거쳐 온 고유의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간의 성취들이 새로운 학문적 흐름 속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는 듯한 점은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한국학 지형 내에서도 의도치 않은 이중의 배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 사학계의 성과를 인용하면서도, 국내 사학계 내에서 과학사 연구가 충분히 참조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국 과학사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해외 학계의 시야에서도 누락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사 연구자들도 한국학계 전반에 과학사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학계 전반에서도 과학사를 조금 더 친근한 역사학의 동료로 보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과학사가 단순히 과학의 진보를 기록하는 분야가 아니라, 동일한 시대적 고민을 안고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성찰하는 학문임을 너그럽이 살피 주시고 함께 대화해 나갈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호철: 다른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신유정: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레퍼런스가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우선 글쓰기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저도 어찌다 보니까, 그런 글쓰기들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과학사학자들은, 예를 들어 과학과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시작. 이걸 해체하기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이고, 폴 섹션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과학 기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학을 얼마나 딱 디스크립션(thick description)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유사한 글쓰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판단이 글쓰기를 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학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돌아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진짜 글을 잘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 책도 잘 안 읽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공부 시작하면서 지도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브레인워싱(brainwashing) 시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걸 풍부한 사료를 통해서 보여 주고, 논리적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은 상당히 드라이 하거든요. 수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고, 사실 상당히 드라이한데, 그거는 뭐 자기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널에 관련해, 그러니까 확실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과학에 있는 사람들은 NCS, 정확한 답이 있고 그다음에 NCS 자매지가 있고, 그 밑으로 쪽쪽쪽 있는데, 그거는 임팩트 팩터라는 확실한 지표, 그러니까 굉장히 계량화된 지표로 저널이 구분되어 있고, 피인용 지수 같은 것들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학에서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면 거의 1억씩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얹혀서 저널들이 리스트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인문사회 계열 또한 최근에 그런 대학 정책의 흐름으로 A&HCI 써야 된다, SSCI 썼네,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학계에서 알아주는 저널이라면...’ 이라는 것이 암묵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영: 제가 대학이나 지식 제도의 문제를 공부의 주제로 많이 다루다 보니 네 분 선생님의 글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읽게 되는데요. 솔직히 네 분 선생님들의 글쓰기가 정말 다른 인문사회과학 쪽 연구자들과 다를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저는 좋은 인문사회학적 연구로 읽고 있습니다. 레퍼런스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한 선생님의 지적은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으로 과학사 쪽 연구의 애독자로서 제 느낌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반 한국학 연구자들이 과학사 쪽 연구를 잘 인용하지 않는 문제만큼이나 과학사 연구자 내부의 상호 인용도 다소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고한 분과학문의 틀바구니 밖에서 이를 비집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과학사나 과학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학문을 추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를 모색하는 것, 따라서 서로의 연구를 인용하고 참조하는 것은 하나의 분과학문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학사 내부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의 연결고리만 있어도 서로 ‘링크’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그 영역 밖의 연구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따져 보면, 정말 기존의 한국사 연구를 섬세하게 읽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보입니다.

마이너한 위치에서 주류 학문적 풍토를 비판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주류’ 학문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정말 아니라면, 과학사, 기술사, 과학학의 연구들은 같은 시기와 같은 대상을 다루는 다른 분야의 한국학 연구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요즘은 과학사, 기술사, 과학학의 접근 방식이 동아시아 지역학이나 한국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마냥 기존의 한국학 쪽이 여전히 문제라는 식으로는, 물론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대화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획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습니다만.

서호철: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학’도 내포와 외연이 완전히 굳어진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과학기술사도 한국에서는 아직은 널리 알려진 분야가 아닌,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공학 사이의, ‘문과’와 ‘이과’ 사이의 틈새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두 분야 사이에 어떤 접점이,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실험적으로 마련해 본 자리였습니다만,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과학기술사, 특히 근현대 과학기술사만 가지고도 2차, 3차 간담회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 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그동안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한국학의 범주를 근현대 과학기술사로 확장하고, 학문 분과 간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 과학사 및 과학기술학(STS) 연구는 서구 중심적인 ‘보편적 과학’이나 ‘노벨상’ 중심의 영웅 서사에서 벗어나, 특정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지식과 실천이 어떻게 공동 생산되는지에 주목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학을 단순히 보편 이론의 ‘사례’로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유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의 한국학’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 과학’의 정체성을 한국인 주체나 한반도라는 지리적 경계에 한정하지 않고, 트랜스 아시아(trans-Asia) 및 관전사(transwar)의 관점에서 지식의 연속성과 초국적 유통을 추적함으로써 한국학의 탈중심화를 시도하였다. 더 나아가 문·이과 분리로 대변되는 국내 학계의 분과학문적 장벽이 한국학의 외연 확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인문학적 성찰을 결합한 ‘오디언스 지향적’ 연구가 인류세와 AI 시대의 도래와 같은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한국학적 수용은 학문의 경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인 동시에, ‘한국적인 것’에 대한 서사를 보다 입체적이고 세계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실천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투고일 2026. 5. 10.

게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과학사(History of Science),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한국학(Korean Studies)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dern East Asian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spects for Korean Studies

Seo, Hocheol · Kang, Kichun · Shin, Youjung · Yi, Jongsik Christian · Jung Joon Young · Hyun, Jaehwan

This article is based on a lively scholarly discussion that sought to expand the scope of Korean Studies, traditionally centered o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includ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also exploring the possibilities for organic connections among these disciplines. Recent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have moved beyond Western-centered narratives of “universal science” and Nobel Prize-oriented heroic accounts, focusing instead on how knowledge and practice are co-produced within specific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Against this backdrop, the roundtable proposed a redefinition of Korean Studies not merely as a “case” illustrating universal theories but as “Korean Studies as a task”—aimed at addressing the distinctive issues confronting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sought to decenter Korean Studies by tracing the continuity and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knowledge from the perspectives of trans-Asia and transwar history, rather than limiting the identity of “Korean science” to ethnic subjects or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critically examined how the rigid disciplinary division between the humanities and the sciences in Korean academia has constrained the expansion of Korean Studies. The discussion also emphasized that “audience-oriented” research integra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tise with humanistic reflection can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addressing contemporary challenges such as the Anthropocene and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clusion, the incorporation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o Korean Studies suggests not only a reconstruction of disciplinary boundaries but also an intellectual practice that rearticulates narratives of “the Korean” within broader and more global contexts.